



마약 없는 일상,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

-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통관·유통단계 우범 우편물 검색 및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논의
- ▶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

【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

□ 정부는 12월 29일(월)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그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첫째,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어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 둘째,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 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5년 138명→‘28년 280명)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임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약 및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관리하는 제도

- 또한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하여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하여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셋째,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하여,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였다.

□ 넷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하였다.

- 전년 동기('24.10.1~11.30, 3,792명 단속, 248kg 압수)와 비교하였을 때,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함과 동시에 압수량은 줄어들어, 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은 감소하였다.
- 또한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범정부 상하반기 특별단속이 효과성을 보였으며, 향후 중독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 : ('24) 33.6% → ('25.1~10) 28.8%

-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물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kg 압수 등이 있다.
-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민간위원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민간위원)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 아울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검사 구역을 둘러보며 사업체계를 점검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0-2379)
		담당자	사무관	조우재 (044-200-2382)
<공동>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옥 (044-200-2889)
		책임자	과 장	강미자 (044-215-7470)
<공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현 (044-215-7471)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877)
<공동>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7)
		책임자	과 장	김동윤 (02-2100-8201)
<공동>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담당자	경 감	김진혁 (02-2100-8224)
		책임자	과 장	김진아 (02-2110-3345)
<공동>	법무부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강등원 (02-2110-3508)
		책임자	과 장	유성오 (02-2110-4075)
<공동>	행정안전부 자치새마을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용 (02-2110-4078)
		책임자	과 장	박종옥 (044-205-3461)
<공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고재표 (044-205-3121)
		책임자	과 장	송명준 (044-202-3870)
<공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공주영 (044-202-3871)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2-2110-1560)
<공동>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2-2110-1567)
		책임자	과 장	정현철 (043-719-2808)
<공동>	대검찰청 마약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희 (043-719-2802)
		책임자	과 장	전수진 (02-3480-2290)
<공동>	관세청 국제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병록 (02-3480-2292)
		책임자	과 장	최문기 (042-481-7740)
<공동>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042-481-7702)
		책임자	과 장	오창한 (02-3150-0141)
<공동>	해양경찰청 형사과	담당자	경 정	길민성 (02-3150-2171)
		책임자	과 장	주용현 (032-835-2058)
<공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과	담당자	경 정	박주식 (032-835-2161)
		책임자	과 장	최혜영 (033-902-5450)
<공동>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	담당자	연구관	조지영 (033-902-5454)
		책임자	과 장	김상진 (044-200-8310)
		담당자	사무관	한재현 (044-200-8371)

◎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개요

- (기간) 10.1~11.30 *10월 명절 및 핼러윈 등 각종 행사시즌 특별 점검
- (방식) 기관 간 합동단속 실시하고, 각 기관별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 집중단속 병행
- (단속주제) ① 국내 현장 유통 차단 ②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③ 해외 밀반입 차단

1 단속 결과: 3,996명 단속, 478명 구속, 마약류 103kg 압수(10.1~11.30.)

- (압수 마약류 종류) 야바 24kg, 필로폰 20kg, 대마 15kg, 케타민 8.8kg 등 마약류 압수

2 주요 단속 실적 사례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 핼러윈 대비 특별단속 등 전국 140개 클럽 등 유흥업소 합동점검· 자체 집중단속으로 예방적 형사활동 전개 및 수사연계(경찰·법무부)
- * 특별단속 기간 동안 클럽 주 사용 엑스터시·케타민·대마초 3종 압수량 4.1배 증가^{5.9→24.3kg}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1 온라인 유통

- (유통경로차단) 정보화시스템(AI)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게시글 차단 및 수사 연계(검찰·식약)
- (수사) 텔레그램 등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단속, 1,010명 검거(경찰)

2 의료용 마약류

- (의료기관 점검·단속) 정보화시스템(빅데이터)을 활용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및 명의도용 우려 의료기관 선별 및 점검·단속(검찰·식약)
- (수사) 병의원 종사자 및 투약사범을 포함한 141명 검거(경찰)

<해외 밀반입 차단>

- 밀수사범 집중 단속, 국제공조 및 해외공급책 정보 활용하여 해외 유통원점(공급조직) 추적·검거(검찰·국정원)
- 관계기관 합동 국제무역선 검색(관세·해경), 휴가철 해외밀수 차단 노력으로 국경단계 밀반입 174건, 90kg 적발(관세)

붙임 2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우수사례

① 대검찰청: 외국인 농장 근로자 상대 야바 등 공급 조직 적발

단속개요 광주지검에서 조직적으로 야바 등을 수입·유통한 외국인 8명 적발, 시가 17억 원 상당 야바(약 88,0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조치 7명 구속기소·태국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 중

시사점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 마약류 유통 급증 상황에서 조직적 공급·유통 외국인 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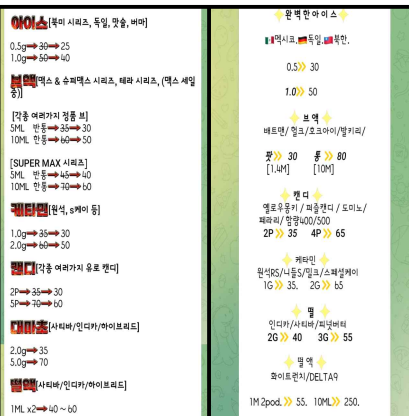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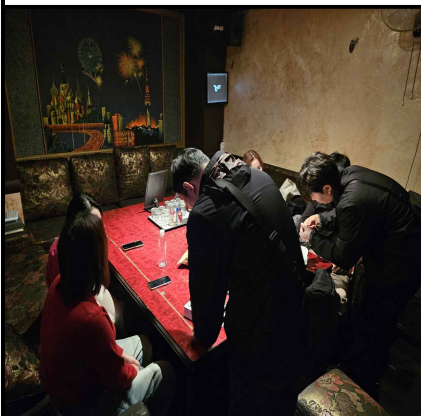
식료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야바(YABA)

② 경찰청: 온라인 마약류 판매채널 운영조직 검거

단속개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3개를 개설·운영하며 국내 유통한 유통조직 58명 순차검거, 마약류 27.1kg·현금 30억원 압수·범죄수익 34.5억원 추정

조치 가상자산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판매채널 운영조직 검거

시사점 '온라인 마약 전담팀'과 '가상자산 전담팀'의 연계로 전국 1,915개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되어 있던 마약류를 모두 수거, 사전확산 차단



유형가 범정부 합동단속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

압수한 마약류, 현금

③ 법무부: 외국인 밀집 유흥가 합동단속 중 마약투약 종업원 검거

단속개요 완도해경과 공조, 마약 투약 혐의 외국인을 특정한 후 숙소에서 불법체류 태국인 1명 검거 및 긴급체포, 숙소에서 마약판매 장부 적발('25.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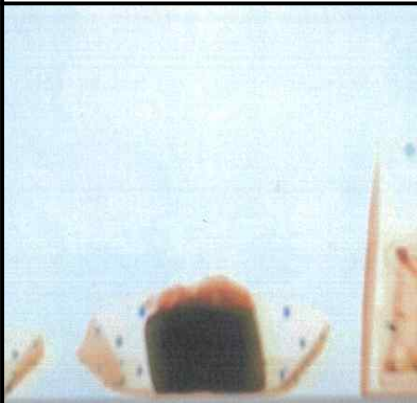
조치 합동조사를 통해 상선 판매책 특정한 후 단속 예정

시사점 유관기관 간 합동단속 시행하여 각 기관 간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함

④ 관세청: 우범 선별모델을 개발하여 폴란드發 케타민 4.9kg 적발

적발개요 북미·유럽發 특송화물의 X-Ray검사 과정 중 현품(스파게티 소스) 내부에서 다른 물질의 은닉정황 발견 → 라만분석기 분석결과 케타민 (총 4.9kg)으로 확인

시사점 이번에 적발한 '특송화물을 이용한 북미·유럽발 마약류의 밀반입 패턴'을 선별모델에 추가 적용하여 향후 특송화물 검사에 활용, 마약류 단속률 제고에 기여



X-Ray 영상



배송박스 적입 상태



케타민 은닉 형태

5 해양경찰청: 도서지역 야바 불법유통 총책 등 15명 검거

단속개요 도서지역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서 마약류 확산 첩보를 입수하고 장기간 추적 수사를 통해 판매 총책 A씨(남, 30대, 태국 국적) 등 15명을 검거

조치 전남 완도군 도서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태국인 등 외국인 상대로 야바를 판매하던 총책이, 휴어기에는 광주광역시로 이동해 일용직으로 종사하면서 광주일대 외국인을 상대로 야바를 불법 판매한 총책 등 15명을 검거, 전원 구속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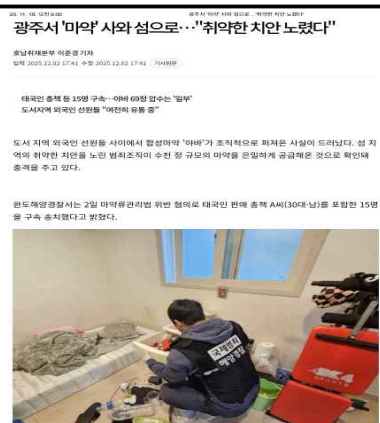
시사점 판매 총책을 포함한 주요 공급 축을 검거 함으로써, 도서 지역으로 이어지는 마약유입 통로 차단에 기여



단속 현장



마약거래 현장



언론보도 내용

6 식품의약품안전처: AI기반 의료용마약류 온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적발개요 식약처(사이버조사팀)는 온라인 상 마약류 불법 유통 광고를 모니터링 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하여 차단

조치 기존 사람이 하던 온라인 모니터링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AI캡스)를 도입하여 정식 운영 개시('25.11월~)

시사점 AI캡스 도입으로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광고 집중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효과	AI캡스 도입 전 - 인력으로만 모니터링 -	AI캡스 도입 후 - AI 및 인력 모니터링 병행 -
불법(의심) 게시물 수집	• 사전 수집절차 없음	→ • 마약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을 월간 약 27,000건 수집
모니터링 효율 증가	• 월간 약 4,200건 적발	→ • 월간 약 5,300건 적발 (21% 증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신속차단	• 차단요청 건을 일일이 심의 시스템 입력으로 장시간(19일) 소요	→ • 식약처와 방미심위 시스템 연계로 적발과 동시에 심의 요청(7일)